

경기연구원 "DMZ 접경지역에 중국식 변경무역제도 도입"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에 중국의 변경 무역제도를 도입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지구를 조성하자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중국 변경 무역제도의 특징과 사례를 토대로 한반도 적용방안을 구상한 '중국 변경 무역제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는 변경 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협력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변경 무역제도 도입 후 실행과제로는 ▲남북한 호시 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km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 간 생활필수품 위주로 교역하는 호시 무역을 도입하고, 접경지역 소재 남북 기업 간 상품과 노동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경지역에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 국민과 기업의 진입도 허용하는 공동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방안도 보고서에서 제안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변경 무역제도는 국경에서 20km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빈곤 탈출 등을 위해 생활편의와 세금 혜택, 교역장려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중국 변경무역제도, DMZ 접경지에 도입하자”

중국경선 20km 내외 접경지 주민 생활편의 등 빈곤 탈출 돕는 제도 경기연, 한반도 적용방안 제안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남북 DMZ(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에 도입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6일 중국 변경무역제도의 특징과 사례, 한반도 적용방안을 제안한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는 국경선에서 20km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다. 비록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지

라도,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내륙지역 발전전략, 일대일로 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km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또한 DMZ 접경지역에 소재한 남북 기업 상호간 상품, 노무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협력지구 구축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 공동 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재수기자

경기연 “DMZ 접경지역에 중국식 변경무역제도 도입하자”

휴전선 남북 20km 이내 거주 주민을 생활편의 교역 허용 남북한 기업간 상품·인력 등 자유로운 거래 추진 제시

남북 (4000) 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 중인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중국 변경무역제도의 특징과 사례, 한반도 적용방안을 제안한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중국 변경무역제도는 국경선에서 20km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다. 비록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내륙지역 발전전략, 일대일로 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km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또한 DMZ 접경지역에 소재한 남북 기업 상호간 상품, 노무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협력지구 구축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 공동 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재수기자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km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또한 DMZ 접경지역에 소재한 남북 기업 상호간 상품, 노무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협력지구 구축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 공동 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재수기자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협력지구 구축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 공동 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재수기자

DMZ에 ‘中 변경무역제도’ 도입하자

경기연구원, 접경지 주민 생활편의 제공 대외 개방 촉진 등 장점 필요성 제기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남북 DMZ(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기연구원의 ‘중국 변경무역제

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는 국경선에서 20km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다.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외 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내륙지역 발전 전략, 일대일로 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 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한 웨일리스 지역은 양국이 공동 투자해 양국민은 물론 제3국 국민 및 기업 진입도 허용한 글로벌 협력지구로 개발됐다. 중국은 이러한 협력사례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가 접한 국경선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행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간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한 상호 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 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남북 상호 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km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 간 생활 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며, 남북 공동협력지구 구축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 공동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hihoilbo.co.kr

